

# 악몽의 그날에 여전히 멈춰진 일상... 유족들 애끓는 추석

## '광주 학동 참사' 100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16일로 100일을 맞았다.

사고로 무너진 건물에서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가족들 생각에 한동안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0일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었지만 "사고당일인 6월 9일 오후 4시 20분에 멈춰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을 지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잠만 잘 때에도 떠나간 가족 꿈을 꾸는 유족들은 추석을 맞아 오는 21일 사고 현장에서 먼저 간 가족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연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다짐과 더이상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라는 게 유가족들의 설명이다.

## "비극의 현장 지날 때 마다 눈물"

### 21일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제 재개발사업 철저한 수사 필요 진상규명·처벌 끝까지 지켜볼 것 재발 막을 '학동법' 제정 됐으면

◇추석날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제=15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추석인 21일 오전 10시 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제'를 연다.

애초 유족들은 가족들만의 조촐한 차례를 계획했지만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등이 많아 추모제 형식으로 바꿨다. 추모제는 코로나 상

황을 감안, 유족과 자치단체장, 정치인 등 50명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후 오후 5시까지 일반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도 가능하다.

유족들은 추모제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학동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이전의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제 법원으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원인을 저버린 철거공사,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단단계 불법 하도급과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참사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은 모두 5건으로, 사고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도급업체 대표, 현장 관리를 맡은 하도급 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공사에 뛰어든 철거업체 직원, 철거공사 원청인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소속 직원, 안전 의무를 외면한 감리자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한솔, 재하도급 업체 백솔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은=유족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비 후려치기, 단가 부풀리기 등 재개발사업 과정의 비리가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면서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특히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최근 귀국, 구속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복막전 비리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한편,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에 공사비 15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사 유가족에게 먼저 15억원씩 보상금을 주고 나서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공모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기차 이용 급증하는데... 더딘 충전소 구축

### 고속도로 휴게소 72%가 부족

### 장흥 정남진 휴게소는 아예 없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소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기차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중인 전국 휴게소 199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36기로 평균 2.68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휴게소의 71.8%인 143곳에서는 평균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했으며 전혀 충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휴게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고속도로 상 26개 휴게소 중 여산(천안 방면) 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68개 휴게소 중 목

감(시흥 방면) 휴게소를 비롯해 9개 휴게소는 충전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 휴게소 중에는 남해고속도로 상 장흥 정남진 휴게소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순천방향)와 경부고속도로 칠곡(부산 방향),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서울 방향) 휴게소 등이 한 휴게소에 10기 이상의 충전소를 갖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 의원은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차 보급도 늘어나는 만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각각 4624대, 8328대로, 충전기는 광주 3576기, 전남 3108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설비 끼여 노동자 사망사고

##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 징역

작업중인 노동자가 플라스틱 파쇄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성플라스틱원료 제조업체 사업주 A(6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사업주 B(64)씨와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제대

로 갖추지 않아 지난 1월 11일 낮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공장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여·51)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숨지는 사고를 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행자용 출입구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 시설이나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20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A씨 등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업장 시정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중화장실 몰카 잡이라 15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북부경찰서, 효령노인복지타운 Silver안심심찰대원들이 북구 일곡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장성군청·삼계면사무소 등 압수수색

## 나노산단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장성군 공무원 입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하고 장성군청과 삼계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나노산단 개발과 관련,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진원·남면 일대 90만여㎡ 부지에 정보

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업종을 망라한 나노기술 집적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당시 나노산단 개발로 3000여명의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을 기대했었다.

경찰은 A씨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오피스텔 신축부지

###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